

학생회, 혹은 학생회론의 재구성

- 인권적·민주적·투쟁적 학생회

공현 = 윤중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emptyyoon@naver.com / taekyoon73@hanmail.net

“자주적 학생회”란 말로 대표되는 1980년대의 학생회론은 직선제 학생회 운동과 그 쟁취라는 성과를 남겼어. 또한 자주적 학생회론과 그 속에서 탄생한 학생회 조직들 및 소모임들은 전교조 출범과 관련된 투쟁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론적·조직적 기반이 되어주었지. 요컨대 자주적 학생회론 그리고 학생자치의 이야기는 1980년대~1990년대 초반 ‘고등학생 운동’의 이론적 바탕이자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어. 현재도 희망, 내일, 함께 등 단체들의 운동 방식이나 전교조가 중고등학생들의 운동을 인식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틀’은 자주적 학생회론, 혹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학생자치 이야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자주적 학생회론이나 학생자치의 틀을 갖고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말에서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이 자주적 학생회론이 지향하는 학생회의 모습은 현실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 좀 더 정확히 묘사한다면 눈썹 정도밖에 실현되지 않았달까? 지금도 자주적 학생회는 계속 추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거야.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학생회는 권한을 가진 민주주의적인 자치 기구가 아니라 특별활동으로 취급되고 있고, 그 자체로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훈련시키기 위한 모의 선거, 모의 회의 활동 정도로 생각되고 있어.

그래서일까. 학생회에 대해 이야기하려니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자주적 학생회론을 기반으로 삼는 학생회 운동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주적 학생회론이 지향하던 학생회의 모습조차 아직 요원한 판국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기가 조심스러운 까닭이기도 해.

이 글은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학생회와 학생회론, 학생회 운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거야. 이 글은 일부에서는 자주적 학생회론을 한편으론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계승하는 형태를 취할지도 몰라. 때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몇몇 학생회 운동의 흐름을 비판할 수도 있지. 들어가기에 앞서 밝히자면, 나는 이 글을 통해 인권적이고 직접 민주주의적인 학생자치, 인권으로서의 자치와 학생회 운동을 고민하고자 해.

1. 기초지식

♥ 학생회

몇몇 중고등학교에서는 축준위(축제 준비 위원회) 또는 간수모(간부수련회 가는 모임) 학교의 하수인, 강제 성금 모금회 등등으로도 불린다. 선도부와 학생회를 혼동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는데, 선도부와 학생회가 한 세트인 학교도 있긴 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다.

제대로 된 학생회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치 기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운영위원회(집행부)와 대의원회로 이루어진다. 운영위원회(집행부)는 보통 선거로 뽑힌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이 선출해서 만들고, 대의원회는 반장 부반장이나 각 반의 대의원들이 참가한다. 흔히 학생회의 회원은 모든 학생들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

♥ 학생회 법제화

축제준비에 헌신적인, 또는 축제준비조차 마음대로 못하는 학생회에 제도적으로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 학생회를 법률에 명시된 학생자치 기구로 하자는 뜻인 동시에, 학생회에 법률을 통해 여러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지금은 학생회에 관해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제17조)라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 직선제 학생회 투쟁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자, 학교에서 반장, 학생회장도 당연히 직선제로! 라는 식으로 나간 운동. 그 전에는 학생회장을 몇몇 학생들의 간접선거로 뽑거나 교장, 교사 등의 지목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수업 중에 집단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불펜을 따각거리거나 운동장에서 시위를 하거나 온갖 짓을 해서, 결국 1988년에 여러 고등학교들이 학생회장을 학생들 전체투표로 직접 뽑는 직선제를 얻었다. 그런 싸움의 결과 지금은 많은 학교들이 직선제 학생회를 갖고 있다.

♥ 학생회 지도교사

학생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학생회를 다스리는 상관. 뭘 학생회 안건으로 삼을 수 있다/없다부터 대의원회의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검열하는 일 등등을 모두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성금 모금 등을 지시하기도 한다.

♥ 교무회의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장, 교감, 교사들이 모여서 음모를 짜는 자리. 소소한 학교 운영에 대한 이야기나, 전달사항 같은 게 이야기되는 자리다. “교직원회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학생들이 교무회의에 함께하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결정하는 대빵 회의. 교장,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인사 등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학칙, 예산, 교육과정, 교과서 및 교육자료, 자율학습, 학교 급식, 학교운동부, 학교 운영 건의 등, 한 마디로 중요한 건 거의 몽땅 다룬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는 학생회 법제화 요구의 핵심 중 하나.

♥ 학생자치

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뜻하거나, 좀 넓게는 동아리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생자치는 축제나 교장에게 건의하거나 휴지 자판기를 놓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생자치를 어떻게 보장할지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

♥ 학교자치

어떻게 해석하면 정부가 간섭 안 할 테니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란 소리인데, 실제론 학생자치를 포함해서 교사회, 학부모회 등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장 또는 교육청-)교장-교감 같은 식의 상명하달 독재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담겨 있다. 정부 간섭의 국가주도 교육을 안 하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긴 하다.

2. 투쟁적 학생회

많은 사람들이 학생회가 잘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학생들의 대의기구인 학생회, 대의원회의가 권한을 갖게 되면 교칙 개정 등의 문제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지. 이 생각 자체에는 그리 틀린 점이 없어. 학생회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강화되지 않았을 때보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더 많은 이점이 있으리라는 것은 일견 당연하잖아? 학생회가 권한을 가진 정치 기구가 아니라 ‘특별활동’ 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해.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쉽게 빠지는 오류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학생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야. 특히 이런 생각은 법과 사회나 정치 교과서가 가르치는 잘못된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들과 연결되어 있어. 제도내의 방법 - 소위 ‘합법적’이고 ‘온건’한 대의제를 통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은 모두 ‘극단적인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 때에 따라서는 ‘비민주적인 것’이라고까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거 말야.

예컨대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 준비위원이었던 김갈피 씨가 쓴 다음 글은 그런 생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그렇다고 단위학교 학생회에서 교내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한다거나 데모를 한다면, 아마 바로 학사경고를 받거나 심한 경우 제적 및 무기정학을 당하겠지요.

(데모나 서명운동 등의 극단적인 방법은 정상적인 토론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만 사용하는 최극단의 방법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듯 합니다. 이것도 토론문화의 부재 때문일까요?)

(김갈피 씨의 「청소년의 정치참여 : 학생과 기성세대간의 소통이 이 나라 장래의 숨통을 틔운다」에서 발췌.)

서명운동은 매우 온건한 방식의 집단행동이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때 흔히 쓰이는 대의제 안에 존재하는 제도적인 정치 행동이야. 그럼에도 김갈피 씨는 서명운동을 가리켜 “극단적인 방법”, “최극단의 방법”이라고 부르고 있어. 집회(데모?)보다 한 단계 위의 직접 행동인 점거나 불복종 운동 같은 거에 대해서는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 과격한 ‘불법’ 행동이라고 할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권력-권한은 근본적으로 직간접적인 행동·실천과 투쟁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이야. 학생회의 제도적 성격을 강조하는 운동은 종종 그 제도적 권한을 어떻게 획득할지 과정과 방법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고, 제도적 권력 특히 ‘대의제’의 틀 안에서 타협적인 권력에만 의존할 경우 학생들의 인권/권리를 얻어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 게다가 집회·시위, 불복종 운동 등은 지극히 민주주의적인 행동 방식이야. 이런 살아 숨쉬는 실천들을 제거한 채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일부 제도만을 모방하여 만든 체계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죽은 제도’에 대한 집착이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보자. 학생회에게 제도적 권한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학생회

나 학생회가 아니냐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되지 못해. 현재의 상황에서 학생회 ‘간부’라는 이름이 주는 메리트는 그 자체로는 생각만큼 크지 않으며 직접 행동과 저항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도가 그나마 최선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그러니까 학생회나 학생회가 아니냐를 떠나서 제도 안팎에서 다양한 직접 행동과 저항을 통해 권력을 창출해내야 하거든.**

☞ 투쟁적 학생회는...

그렇기 때문에 투쟁적 학생회가 필요하다는 건데... 투쟁적 학생회는 말하자면 학교에 대해 “~~ 해주세요”가 아닌 “~~ 하지 않으면 ~~하게 해서 곤란하게 만들어주겠다. 당장 해라”, “~~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해주마.”의 태도로 움직이는 학생회라고 할 수 있어. 서명 운동이나 언론폭로전 같은 비교적 온건한 방식과 학교 안의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홍보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고, 만약 필요하고 가능할 경우에는 다수의 시위행동(운동장 시위, 복도 시위, 현수막 펼치기, 종이비행기 시위 등)이나 다른 단체와 연계한 압박, 학교 운영에 대한 조직적인 태업과 불복종(수업시간에 통일된 행동을 통해 수업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등하교시간 거부, 동맹휴업이나 수업거부 등)까지 생각할 수 있는 학생회 말야.

투쟁적 학생회는 지속적으로 학생들 다수를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해. 저항에 익숙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은 학교와 대립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학교의 탄압에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지. 그동안 받아온 교육, 즉 ‘협상’, ‘타협’은 좋은 것이며 ‘갈등’, ‘대립’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관념 때문에 학생들은 ‘대화’와 ‘협상’으로 풀자고 하는 식의 학교 측의 회유에 넘어가기가 쉬워. 이걸 학생회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여론전과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회가 설정하고 있는 목표가 학생회가 아닌 학생들의 요구 사항들과 괴리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도 필요하지. 투쟁적 학생회는 하나의 싸움을 시작할 때 그 싸움의 목표를 되도록 원칙적인 것으로 잡아야 하며, 원칙적인 주장으로 의견이 다른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설득해야 해. 왜냐하면 학생회를 비롯한 사회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그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신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게 첫째겠지. 또한 가장 원칙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내세우더라도 정말 강력한 직접 행동을 끈기 있게 벌이지 못한다면 학교 측과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요구사항이 완화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한 발 물러선 요구안을 내놓으면 더 밀리게 될 뿐이야. 만약 이 설득이 통하지 않고 의견이 다른 학생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목표를 조정해야 하겠지만 설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해.

그러므로 홍보물을 뿌리고 벽보를 붙이고 게시판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여론 작업과 대의원회의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을 통한 물밑에서의 여론 작업 그리고 공청회나 건의함, 대의원회의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은 일상적으로 해야 해. 그 내용은 현재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관계를 알리는 것, 학생회 집단이 생각하는 관철시켜야 하는 목표를 알리고 설득하는 것, ‘대화’는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학교 측의 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 행동과 저항을 통해 충분한 발언력을 얻은 후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 등이 될 수 있겠지.

이런 싸움이 굳이 학생회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냐. **이 싸움은 학생회가 아닌 다른 모임이나 새롭게 창출된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 만일 싸움의 국면에서 학생회가 투쟁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왜곡한다면, 학생회가 아닌 다른 모임이 실천과 직접 행동을 통해서 투쟁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풍생고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풍생고는 2005년 800여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두발규정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어. 그 당시 학교 측은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학생회와 협상하려고 했지. 학생회장은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창문에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이 학교과의 협상 자리에 가면서 “나만 믿어!”라고 말하고 갔다고 해. 그리고 돌아와서는 “애들아, 우리 상고머리다!”라고 했다지. 학생들은 “반삭이던 것보단 나아졌지만 그래도 귀두컷은 좀 아니지 않냐.”라고 우울해했다고 하고…. 슬프고도 재밌는(?) 이야기이지?

이 사례 하나에서 학생회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야. 나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학생회는 엘리트이고 안 되는 거야.” 같은 불신을 품기보다는 좀 다른 상상을 해볼 것을 제안하고 싶어. 풍생고와 같은 경우에 만약 직접 시위를 주도하고 시위를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이 독자적인 모임을 꾸려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독자적인 협상단을 꾸려서 학생회장이 아니라 그 협상단이 학교 측과 대면했다면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 혹은 애초부터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학생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더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을 수도 있었을 거야.

☞ 잊혀진 역사

투쟁적 학생회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처음 제기하는 게 아냐. 이는 이미 과거 자주적 학생회론 등에도 들어 있는 거고, 과거의 광주학생항일운동이나 중고등학생들의 운동 등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의식적으로 간과하는 부분이야.

예컨대 자주적 학생회론을 이야기하는 많은 문건들이 ‘소모임 활동’이나 ‘직선제 학생회 쟁취’ 사례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히 소모임 활동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소모임이 좀 더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등 소모임 형태가 가지는 한계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선제 학생회를 구성한 후에도 학생회가 더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소모임이 학생회에 관여해야 한다거나, 소모임이 어떻게 투쟁해서 학생회의 권한을 쟁취해내고 학생회를 구성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학생회 또는 학생자치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선결 과제나 기본 수단으로 인식하고 그 문제에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는, 학생회 자체에 힘을 부여하는 것 또한 그런 운동들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결국 정말 중요한 건 학생회건 다른 문제건 투쟁적인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런 전통이 잊혀졌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아이러니가 있어. 아까 인용했던 김갈피 씨의 글이 첫 머리에서 광주학생항일운동 때 발표된 요구사항을 인용하면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진원지였으며 자신이 이 아래에 있는 글(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 때 발표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읽고 묘한 감흥을 느꼈다고 서술하고 있다는 거야.

학생대중이여 꺾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에서!

- 1, 검거자를 우리의 힘으로 탈환하라
 - 2, 검속자를 즉시 석방하라
 - 3, 교내경찰권침입에 절대반대하라
 - 4, 교우회 자치권을 확립하라
 - 5, 교내외에서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 6, 직원회의에 생도의 대표를 참가시켜라
 - 7, 조선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 8, 식민지노예교육을 철폐하라
 - 9,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
 - 10, 전국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하라
- 1929.11.11. 오쾌일(吳快一)

“학생대중이여 꺾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에서!”라는 말이나 “우리의 힘으로 탈환하라” “교내외에서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등의 문구에서 우리는 직접 행동을 통한 투쟁, 자신들의 대중적인 힘으로 ‘탈환’하고 ‘획득’하는 것을 강조했던 정신을 읽을 수 있어. 그런데도 김갈피 씨가 자신의 글에서 학생회의 제도적인 권한이나 ‘협상’, ‘대화’ 같은 부분에만 천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도 투쟁적인 부분을 얼마나 간과하고 상실하고 있는지 느끼게 해줘. 이른바 ‘시대’가 바뀌었다는 명목으로 말이지. **학생회가 투쟁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잊혀진 전통들을 다시 계승하고 거기에 강조점을 찍자는 거야.**

“투쟁적 학생회”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 한 가지는 **학생회나 학생회에 준하는 학생들의 자치 조직이 제도적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그 수단, 과정으로서 학생회 혹은 비학생회 조직이 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학생회가 학생들의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학교 측과 대립하고 대결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역사적으로도 직선제 학생회 투쟁이 아주 활발히 벌어지고 이어서 참교육 운동이 뿔뿔이 이루어졌던 학교들의 경우엔 학생회가 예산권을 포함해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던 때가 있었어. 하지만 이러한 권한들을 제도화시키고 공고화시키기도 전에 탄압과 투쟁 주역들의 졸업이라는 악조건이 닥쳐왔고, 결국 대부분의 학교들에는 ‘직선제 학생회’라는 자주적 학생회론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제도만 남아있게 되었지. 현재를 보면, 풍문여고 같은 경우는 학생회의 ‘전통’ 같은 형태로 비교적 많은 자율적인 행사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큰 영향력은 없을뿐더러, 이러한 풍문여고조차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 있어. 그 외에 많은 학생회들이 그 ‘역사’를 잃어버리고, 권한을 잃어버렸어. (모든 학생회가 힘을 잃어가던 시기에, 풍문여고 학생회가 마지막까지 끈기있게 예산권과 같은 권한들을 쥐고 있었던 곳이란 걸 알아둬.)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학생회장 선거’ 같은 것조차도 학교내 소모임이나 다른 조직들이 전개한 직선제 학생회 투쟁의 성과란 거야. 옛날에는 반장들이 모여서 교장이나 교사들의 감시 속에 간선제로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게 보통이었고 심한 경우에는 교사나 교장이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 그리고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에는 많은 학생회가 그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었어.** 만약 투쟁을 뒷받침하는 힘이 더 강했

다면, 그런 더 많은 권한들도 제도화하고 공고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 지금 바로 여기에서부터

학생회의 권력이 것처럼 투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학생회가 학생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대립하고 갈등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학교의 권력 구조 전반을 재편하기 전에는, 학생회가 물로 보이는 순간부터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서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급속도로 상실하기 십상이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투쟁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 타협과 휴식의 순간에도 조직적인 힘을 계속 키워나가고 싸울 준비를 멈추지 않는 것, 관철시키겠다는 의지, 그런 것들이 중요해.

학생회가 무력화된 현실에서 많은 학교의 학생회가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이나 인기 많은 일부 학생들이 모여서 시간이나 때우고 같이 간부수련회나 가는 모임, 심하면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고 선도부 같은 일을 하는 모임 정도로 전략해 있는 현실에서 투쟁적 학생회를 주문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도 몰라. 그래서 제도적으로 먼저 권한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회를 활성화시키고, 학생회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캠프나 연수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회 관련 운동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학생회를 바꾸는 게 꼭 학생회 임원들로부터 출발할 필요는 없어. 지금 당장 학생회가 아닌 학생이더라도 학생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운동, 학생자치를 얻어내기 위한 싸움을 전개할 수 있고 그런 싸움을 전개하면서 나중에 학생회에 새롭게 참여할 수도 있어. 학생회에 관련된 운동을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하게 상상할 필요가 있어. 나는 제도(학생회 법제화)가 먼저냐 의식개선(학생회 임원 교육)이 먼저냐 같은, 결론이 날 수 없는 논쟁을 계속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변화할 수 있는 부분, 가능한 사람들부터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지.

3. 민주적 학생회

투쟁적 학생회에 대한 고민은 사실 학생회 자체의 운영에 대한 고민은 아닐지도 몰라. 왜냐하면 투쟁적 학생회라는 말은 학생회 집단이 학생회 외부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하는 이야기거든, 보통. 즉 억압적인 학교 구조 안에서 학생회가 어떻게 권한을 획득하고 어떻게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지.

민주적 학생회라는 말은 학생회 자체의 운영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흔히 학생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를 많이 이야기하잖아? 직선제 학생회 때도 그랬고….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보려고 해. 약간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읽어주면 좋겠어. 지루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민, 즉 사람들이 주인이 된다는 의미이고 조금 더 정치학적 용어를 쓰자면 사람들에게 주권(主權)이 있다는 의미야. 한자로 표현하면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에서 주권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사회를 운영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켜. 뭐 흔히들 통치받는 사람과 통치하는 사람의 일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건데, 말하자면 자치와 자유의 권리라고 할 수 있지. 민주주의는 분명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같은 헌법 한 줄을 읊어주거나, 언론의 자유가 있거나 집회의 자유가 있는지를 따지거나 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건 아냐.

그런데 이 주권재민, 이라는 말에는 미묘한 딜레마가 있어. 민(民)을 대체 어떤 것으로 정해놓느냐의 문제라고나 할까?

봐봐, 이 세상에는, 이 사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이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사람들 각각에게 주권이 속한다고 하면, 사회의 운영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흔히 이야기하듯이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면, 다른 소수들의 주권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여하간 무시되고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잖아? 혹은 어떤 이유 때문에 주권의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소수들이 생기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주권이 개개인에게 속하는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주권의 더 완전한 행사를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에 따라 이합집산(흩어졌다 모였다…)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아님 주권 행사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그 사회를 떠나서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더 정당한 걸지도 모르지.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각각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은 사람들 모두가 공동으로 가진다는 거야. 교과서에도 나오는 장 자크 루소 씨 같은 사람들은 “일반의지”라는 걸 가정하면서 사회계약 이후에는 사람들 개개인이 아니라 일정 부분 동일한 정신을 공유하는 하나가 된, 공공이익을 고려하는 집단이 존재하게 되며 그 집단을 통해 주권이 행사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 교과서에도

나오는 프랑스 혁명 때 특히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해.

하지만 난 이런 집단적 주권론은 때때로 거짓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의한 사회계약 같은 건 사실은 이루어진 적도 없는 거고, 언제나 옳거나 공공이익만을 고려하는 “일반의지” 같은 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공공이익이란 말 자체가 그 뜻이 모호하지 않아? 공공이익을 대체 누가 규정하는 건지도 문제가 되지. 집단적 주권론은 집단의 결정이 인간들을 억압하는 결과로 빗나가게 되지는 않을까? 나는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 이 존재하는 사람들이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것도 환상이지.)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와 맥락,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간’이지만….

더글러스 러미스 씨의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라는 책에 보면, “**무력감을 느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 이런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한 인간이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 개입하고 그 사회의 정치를 창조하고 정치에 참여할지, 어떻게 자신이 속한 사회의 운영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다는 -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능동적인 주권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야. 곧 나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속한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이 사회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치할 수 있는 것, 지배하지도 지배받지도 않으며 함께 정치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아테네의 민주정”이라는 식으로 배우는 정치형태는 본래 “민주주의(테모크라시)”라는 이름이 아니라 “비지배(이소노미)”라는, 누구도 지배하지 않고 누구도 지배받지 않는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는 아나키즘의 구상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내가 뽑은 대표가 일하는 걸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직접 정치를 만들어가고 ‘탄생’시키는 것, 변화시킬 수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가능한 한 적게 느끼는 체제.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해. **다수를 존중하고 집단을 강조하는 집단적 주권론은, 누군가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기 쉽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어.**

이런 집단적 주권론에 기초를 둔 “대의제”도 마찬가지야. 대의제는 집단의 주권을 다수의 표를 얻어 선출된 대표에게 탁, 통째로 위임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어. 하지만 지금 대의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느낌을 받고 있지? 우리가 선출한 대표가 우리들 각자의 요구와 각자의 정의를 정치에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서 같지는 않아.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는 건 무력감이야. <심슨 가족들>이라는 애니메이션에는 이런 대사가 나와. “우리가 대표를 뽑는 건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야!” 이 말이, 현재 대의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선거 기간에만 ‘유권자’가 되는 우리들. 선거가 없을 때는 ‘무권자’와 ‘유권자’의 중간 그 어디에 어중간하게 존재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소위 ‘엘리트’가 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걸까? 많은 대의제 사회에서 투표율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거나 겨우 60% 근처라는 건,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정치에 대한 절망감·무력감을 시사하는 건 아닐까?

내 주장은 단순하고, 어쩌면 고전적인 것일지도 몰라.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씨의 『오래된 미래』라거나 그런 류의 책들을 읽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직접 민주주의적으

로 운영되고, 인간적 가치가 우선되는 자치 공동체는 과거부터 시도되어왔어. 우리가 그것을 “꼬핀”이라고 부르든 “소규모 공동체”라고 부르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형태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역사 속에 존재해왔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념은 대의제보다는 이런 사회·정치 형태와 더 잘 맞는 게 아닐까?

설령 대의제 민주주의처럼 보이는 형태를 택하더라도, 정치 운영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공론장을 형성해갈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장치들이 있어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민주주의에 가까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쯤에서 잠깐 쉬어도 돼. 앞으로의 이야기들은 더 지루할지도 몰라.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학생회도 마찬가지로란 거지 뭐. 적어도 학생들이 학생회를 선출한 이유가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여선 안 될 거 아냐? 흔히 학생회의 ‘회원’은 모든 학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학생회가 아닌 학생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다면 그건 별 의미 없는 규정이 될 거야. 학생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론장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학생회 운영이 민주적으로 될 것인지, ‘주권자’로서의 청소년들의 권리를 어떻게 최대한 보장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민주적인 학생회가 어떤 건지 이야기해볼까. 물론 이건 내 구상일 뿐이니까,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실험해보도 돼. 그리고 이건 제도적으로 어떤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주로 쓴 거지, 실제 학생회 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떤 게 좋다고 쓴 건 아니니까 실제 적용할 때는 잘 살펴서 써야 할 거야.

☞ 기본적인 기구,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

먼저 우리가 흔히 ‘학생회’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집행부)”가 있어. 대의원회는 보통 각 반에서 뽑은 대의원들과 학생회장/부회장이 모인 기구야. 학교에 따라서 반장/부반장이 대의원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대의원을 따로 뽑는 경우가 있어. 대의원들은 각 반에서 이야기된 것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회의 내용을 다시 반으로 가지고 돌아가. 대의원회가 모두 선출된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운영위원회는 보통 학생회장과 부회장만 투표로 뽑히고 학생회장의 지명이나 공모 등을 통해 다른 운영위원들을 뽑아서 만들어. 구성원들을 뽑는 방식으로만 비교하면, 대의원회는 의회 비슷하고 운영위원회는 행정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나는 운영위원회 임원들을 뽑을 때도 다수의 청소년들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임원들을 직접 선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선출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의원회는 좀 굵직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운영위원회는 결정이 된 것에 대해 세부적인 일 처리를 해. 간단히 말하면 대의원회는 의결기구고 운영위원

회는 실무기구랄까?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고 대의원들이 일을 분배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딱 잘라서 나뉜다고 할 수는 없지.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해. 대의원회를 통해서 학생회는 각 반 단위까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또 반 단위까지 결정 사항을 알릴 수 있지.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있기에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학생회 사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실현될 수 있어.

한편으로는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서로 권력을 분배하여 견제하는 역할도 해. 대의원회는 학생회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의 일 처리가 좀 더 민주적으로 학생들의 통제 하에 있도록 제어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대의원회를 거쳐오는 여러 의견들을 조정하고 학생회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을 대의원들을 통해 전달해서 여론 형성을 주도할 수 있어. 대의원회가 각 반 단위에서 의견들이 만나는 장이라면, 운영위원회는 예산 분배나 의견 조정, 사업 집행 등 좀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장이야.

대의원회 의장을 누가 맡느냐는 내가 생각하기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대의원회 의장은 학생회장 말고 다른 사람이 맡는 게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할 사람이 없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땐 학생회장이 겸임할 수도 있지만, 대의원회와 관련된 업무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의장이 담당하고 학생회장은 대의원회에 학생회장 자격으로 따로 참가할 수 있게 하는 형태가 원칙적으로 맞는 거 같아.

☞ 민주주의의 핵심, 공론장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론장’이야. ‘공론장’이라는 개념은, 운영위원회가 어떻고 대의원회가 어떻고 하는 것보다 민주주의에서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운영위원회나 대의원회에 속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정치(자치)를 실천하고 정치(자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론장은 꼭 필요해. 만일 ‘공적인 것’, ‘정치’에 대한 온갖 의견이 자유롭게 오가고 여기에서 오간 의견이 실제 학생회 정치에 반영되는 그런 장(場)이 없다면, 학생회가 표방하는 민주주의는 단지 대의제의 일부 제도를 모방한 죽은 정치 - 무력감의 정치에 불과하게 될 테니까.

공론장은 수많은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어. 때로는 중요한 어떤 문제에 대해 학생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이 되고, 때로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공간이 돼.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사실/사건이 있다는 정보들이 오가면서 서로 경쟁하는 공간이고, 사람들이 서로 인식을 공유하는 공간이고, 다양한 견해들이 탄생·공존·경쟁·갈등하고 해석되는 공간이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교 신문, 학생회보 등의 정기적인 언론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통 신문이나 학생회보 등의 언론은 비록 다수가 발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건,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알리는 기능은 잘 할 수 있거든. 공론장의 형성은, 우선 사람들이 사건,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출발하니까. 언론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그 언론을 어떻게 읽게/듣게/보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해.

물론 공론장은 단순히 신문을 읽는 ‘독자’들로만 형성되지 않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많은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고 의견을 주장하고 발표하는 공간이 진정한 공론장이야. 최근에 공론장의 가능성을 가진 도구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학교 홈페이지나 온라인 게시판** 같은 게 있어. 다만 설문조사 결과 같은 걸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온라인 공간이 공론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컴퓨터를 켜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보다는 **아예 통학로나 중앙현관, 각종 복도별로 공개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시도야.** 대학교에서는 여기저기 게시판이 있어서 “대자보”(벽보)라는 거나 포스터 같은 걸 붙이곤 해. 뭐,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문제지 형식은 큰 차이는 없어. 가능한 한 여러 형식을 모두 사용하는 게 좋을지도.

공론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도적인 기구인 학생회에서 참고하고 논의의 바탕으로 삼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단순히 참고로 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건 제대로 된 공론장이라 할 수 없어. 그 공론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실제로 학생회의 활동이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해. 건의함이나 지정된 공론장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회의 때 안건이라거나 각 학급에서의 논의 내용 등에 넣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일 수 있겠지. 그리고 학생회 또한 학생회 이름을 걸고 공론장에서 공식적 입장들을 밝혀나감으로써 공론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되 학생회와, 정치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학생회 쪽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혹은 학생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해서 게시판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이 아니라 직접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거야.** 요즘 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그냥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모두 공식적인 의사결정과 논의에 99% 반영되게 하는 장치들을 가진 공청회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

아니면 아예 많은 대안학교들에서 진행하는 “식구총회”처럼,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총회를 진행해볼 수도 있겠지.** 한 학교 학생 수가 1000~2000명에 이르는 구조에서는 쉽지 않은 일인 건 사실이지만, 학생 수가 좀 더 적은 학교는 이런 총회를 여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어. 총회가 너무 지루하지 않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브리핑과 게시판 등에서의 사전 논의 등 여러 장치가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많은데 총회를 열고 싶다면 학년별 총회를 여는 방식 등을 고민해볼 수도 있어.

☞ 대표자들에게 채우는 고삐, 소환제

학생회를 학교 학생들의 민주적인 영향력 속에 넣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장치로는 소환제를 생각해볼 수 있어. 간단하게 말해서 소환이란, 대표자가 옳지 않은 짓을 하거나 그 사람을 선출한 사람들의 의견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뽑은 사람들 중 몇 % 이상이 동의를 해서 함께 요구하면 그 사람을 ‘소환’해서 공청회, 청문회를 열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한 뒤 그 사람을 대표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거나 할 수 있는 제도야. 꼭 소환제가 대표자를 쫓아내기 위해서만 있는 제도는 아니야. 소환제를 통해서 대표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공론을 형성할 수도 있지.

세부적으로 소환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하는 건 학교 상황마다 좀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많으니까 딱히 여기에서 이야기하진 않을게...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 소환제’에서는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하면 소환투표가 시행되게 되어 있어.

여하간 소환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대표자, 공무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운영위원회 간부, 대의원회의 대의원 등 학생회에서 직책을 갖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학급의 대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학급에 소환권이 있고, 운영위원회 간부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소환권이 있을 수 있지. 이 소환권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대표자들, 공무원들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 민주집중제를 넘어, 다양한 정치로

학생회의 운영과 강화에 대해서 “자주적 학생회론”은 민주집중제를 언급하고 있어. 민주집중제는 요컨대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 — 특히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한다는 소리야.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이란 표어는 민주집중제의 성격을 100% 말해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주지.

하지만 내가 민주집중제에서 받는 인상은, 그게 그다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정말로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면, 굳이 ‘집중’, ‘통일’이란 말을 써가면서 요구할 필요는 없을 거야. 결국 민주집중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결정된 사항이라면 따라라.”라는 강요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결정의 절차는 중요시하겠지만 그 결정된 내용 자체에 대한 반대와 불복종의 기회를 열어놓고 있지 않아. 일이 다 끝난 후에야 ‘사후비판과 평가’ 정도를 진행할 수 있구.

학생회가 모든 학생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고 기구인 이상 학생회는 민주집중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선 안 될 거야. 그렇지 않다면 학생회는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과 그 학생회장과 친한 몇몇 사람들이, 다른 학생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대중동원 기구에 지나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진정으로 ‘행동의 통일’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겠지. 학생회 기구에 있는 임원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할 수는 있어도 학생회의 권력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도록 강제해선 안 돼. 법치사회에서 뭔가를 강제할 수 있는 건, 그 법에 정해진 것들 뿐이고 또 그 법의 내용도 인권의 존중이나 민주주의, 공공복리 등 여러 기준에 부합해야 하나니까.(예 : 폭행을 쓴 사람이나 절도를 범한 사람에게는 ○○○ 같은 벌을 준다.)

만약에 학생회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하고라도 시급하게 어떤 일을 처리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온다면, 그 일은 학생회의 이름으로 학생회 단위에서 진행되지 않고 그 사람들 혹은 그 집단들 이름으로 먼저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거야. 단지 급하다는 이유로 학생회를 ‘간부’들의 기구로 만들어버려선 곤란해.

민주집중제의 발상에 의해서는, 학생회는 전체 학생들을 ‘대표’하는 단일한 기구이고 학생자치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학생자치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학생회라는 단일한 기구가 아니라 학생자치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생각을 지닌 다양한 집단들이라고 생각해. 여러 집단들이 서로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제대로 학생자치가 이루어지겠냐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천을 하는 집단들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나 ‘정치’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되묻고 싶어. 정치나 민주주의는 획일화나 통일의 과정이 아냐. 오히려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부딪치고 만나는 과정이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학생회를, 거대한 ‘적’(학교나 재단, 입시체제, 잘못된 사

회 등)을 상징하고 그 '적'에 맞서기 위해서 학생들을 단결시켜 동원하는 기구로 생각해왔는지도 몰라. 그러나 이런 발상은 군사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야. **학생회는 학생 모두가 그 구성원이자 주인인 민주주의 - 비지배(이소노미)의 정치기구이고, 학생자치는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내용으로 진정한 '자치'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여야 해.**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의 학생회 기구의 제도적 권한들을 강화하는 것보다 학교 안에서의 정치와 관련해서 여러 모임들이 생겨나고 그 모임들이 '흐름'으로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치 정당이나 여러 사회단체들처럼 말이야. 우리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학생회가 어떻게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나는 거기에 더해서 학생자치의 힘을 창조해내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흐름들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야만 진짜 학생회·학생자치 운동이 가능할 거 같아.

4. 인권적 학생회

인권으로서의 자치

청소년인권운동에 관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학생회 또는 학생자치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기본 선결 과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나와있듯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의견을 표시하고 반영할 권리는 매우 중요한 인권의 하나야. 학생자치는 그 자체로 모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인권이며,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모든 학생들이 정말 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해.

집단과 개인 : 자치의 한계

인권적인 학생회 구조

5. 학생회 운동의 구체적 가이드

학생회장 선거

운영위원회 만들기

기본 중에 기본, 회의하고 일처리 하는 법

학생회 소식 전하기

교칙, 학사일정 등의 문제

동아리, 학생활동 지원

축제, 학생의 날 등 학생회 행사 일정

사건에 대한 대응